

국민연금, ‘수익성-외환시장 안정’ 조화 위해 새 판 짠다

구윤철 부총리, 기자간담회

“국민연금 규모, 글로벌 세번째
외환시장 단일 플레이어 최대역할
모든정책 고려, 외환시장 안정 총력”

정부가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 간 조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의 ‘뉴프레임워크’(새로 설계된 틀) 구축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부는 이 같은 움직임이 원화 값 하락 대응을 위한 미봉책이 아님을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6일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키기 위해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외환시장에 대한 질의응답이 주를 이뤘는데, 구 부총리·기재부가 사전에 주제를 한정했다.

그는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연기금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외환시장 등 최근 경제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연금 규모가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상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보유 해외자산도 외환보유액보다 많아지면서 국민연금이 외환시장 단일 플레이어 중에서 최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연금의 해외투자가 늘어나면서 국내 시장에서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어느 시점이 지나고 달러를 매각해 원화로 바꿔야 하는 시점에서는, 대규모 해외자산 매각에 따른 환율하락 영향으로 연금재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안정적 연금 지급이 가

능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구 부총리의 설명이다.

한편, 이 뉴프레임워크 논의가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려는 목적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언론 보도처럼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뉴프레임워크의 세부 내용으로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을 고려하겠다”라고만 밝혔다. 이어 “수출기업과 협의를 시작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누구든 만나 소통하겠다”고 했다.

미국 재무부 또는 국민연금 내부에서 우려가 제기됐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미 재무부도 (우리나라의) 환율시장 안정성을 원하는 것 같다. 국민연금으로도 외환시장 안정성이 수익성 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의 환율 변동성 관련해서는 “구조적인 외환 수요 압력이 더해져 다른 통화 대비 더욱 민감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는 투기적 거래

와 일방향 쏠림현상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이른바 ‘전략적 환헤지(위험회피)’에 대해선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하는 1기금운용위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기재부는 기금운용위의 일원으로 국민연금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이 조화롭게 고려되도록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달러를 보유한 수출업체의 원화환전을 유도할 인센티브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수출기업들도 한국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고 나름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환율 상승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서학개미’를 대상으로 한 세제상 불이익 가능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다만 “정책이라는 것이 상황 변화가 되면 언제든 검토하는 것이고 열려 있다”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 1면 ‘2000억弗 對美투자…’서 계속

내년 ESS·탠덤셀에 1500억… ‘에너지고속도’ 구축 속도

구윤철 경제부총리

‘제3차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차세대 태양광 등 6개과제 중점 추진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가운데 ‘에너지 분야’ 핵심과제에 대한 내년 예산 및 추진방안이 공개됐다. 차세대 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에 1200억 원이 투입되고, 차세대 태양광으로 불리는 ‘탠덤셀’에 34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 이른바 ‘에너지고속도로’(재생에너지를 수도권 등 각 생활권에 보내기 위한 전력망) 구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전담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에너지 분야의 과제별 내년도 예산 투자규모 및 상용화 일정 등이 포함됐다.

기재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



북미에너지산업 전시회 ‘RE+ 2025’에서 일반에 공개된 삼성SDI의 차세대 배터리. /뉴시스

면 정부는 ▲차세대 태양광 ▲차세대 전력망 ▲해상풍력 ▲초고압직류송전(HVDC) ▲그린수소 ▲소형모듈원전(SMR) 등 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간 프로젝트를 소개했다면 각 과제별 예산·수치 목표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정부안 기준으로 과제별 실행 계획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3차 계획에서 두드러지는 대목은 차세대 전력망 구축이다. 새롭게 반영된

예산 규모가 가장 큰 데다 정부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위해 처음으로 에너지저장장치·마이크로그리드(MG) 설치 물량, 실증 규모 등을 구체화했다.

내년에는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 설치에 1176억 원 ▲산단·캠퍼스·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하는 MG 실증에 702억 원 ▲에너지공대 기반 ‘K-그리드 인재·창업 밸리’ 조성에 195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

서해안 중심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30년까지 셀 효율 35% 달성을 목표로 한 차세대 태양광 탠덤셀도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내년에는 총 336억 원 규모의 R&D가 반영됐고, 상용 모듈 개발·실증, 양면형·우주용 탠덤셀 개발 등 신규 과제만 17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2028년 세계 최초 상용 모듈 출시하고, 2030년까지 셀 효율 35%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해상풍력 분야에는 초대형 20MW+급 터빈과 부유식 시스템 국산화가 핵심이다. 청정수소 공급망을 구축하는 그린수소 프로젝트에는 총 318억원의 수전해 R&D가 편성됐다. 제주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그린수소 10.9MW 실증은 내년도에도 계속 진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전력 수요 구조 변화와 글로벌 에너지 시장 재편 속에서 전력망과 태양광 등은 내년 실행의 핵심축”이라며 “이번 계획은 각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굴리는 첫 해의 로드맵”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전략투자기금 재원 외환수익 등으로 조달

이후 산업부 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산업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 협의위원회(Consultation Committee)를 통해 대미투자사업의 추진에 대한 우리의 의사를 밝히고 협의에 나선다.

한미 협의위원회에서는 미국 투자위원회가 미국 대통령에게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를 추천해 투자처가 선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투자자금의 집행을 심의·의결한다.

사업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대미투자 후보 사업을 발굴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사업관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 한미 협의위원회 등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특별법안은 특히 이 같은 과정에서 운영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양국 MOU에 명시된 7가지 안전장치를 준수하도록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연간 송금한도 200억달러 준수 ▲외환시장 불안 우려 시 집행 조정 ▲상업적 합리성 없는 투자 방지 ▲국내법과의 상충 여부 미국 측에 제시 ▲벤더·P·M 선정 시 한국 기업·인력 우선 추천 ▲미국 정부의 사업 지원(규제 절차 가속화, 에너지·용수·전력 공급 등) 협의 ▲20년 내 투자금 회수 어려울 경우 현금흐름 배분비용 재협의 등이다.

특별법안은 또 전략적 투자의 재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기금 재원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과 해외에서의 정부보증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한다. 이렇게 조달한 재원은 MOU에서 정한 대미투자(연 200억달러 한도)와 조선헌력투자 금융지원(보증, 대출 등)에 사용되며, 체계적 관리를 위해 대미투자 계정과 조선헌력투자 계정을 구분해 관리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누리호, 우주 자기장·오로라 관측 임무

2년6개월 만의 비상

‘중량 2배’ 기술·산업 중대 분수령
위성 13기 총돌없이 궤도에 뿌려야

국산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2년 6개월 만의 비상을 위해 발사대 기립을 마치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번 4차 발사는 체계종합기업이 처음으로 전 과정을 주관하고, 지난 3차 발사 대비 2배 늘어난 중량을 싣고 떠나는 만큼 기술적·산업적 측면에서 중대 분수령

이 될 전망이다.

26일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에 따르면 누리호 발사의 최대 관건은 ‘무거워진 몸집’을 감당할 정밀성이다. 누리호 4차 발사체의 탑재 중량은 약 960kg으로, 지난 3차 발사 때보다 2배가량 늘었다. 목표 고도 역시 기존 550km에서 600km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3단 엔진이 3차 때보다 약 24초 더 연소해야 목표 궤도에 안착할 수 있어, 추진·연료 계통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성 사출 난도도 높아졌다. 이번에는 주 탑재체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516kg)를 포함해 총 13기의 위성이 실린다. 이를 위해 신규 적용된 ‘다중 위성 어댑터(MPA)’가 13기의 위성을 순차적으로, 총돌 없이 궤도에 뿌려줄 수 있는지가 성공의 열쇠다.

이번 발사가 ‘심야’에 이뤄지는 이유는 주 탑재 위성의 임무 특성 때문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차세대 중형위성 3호는 우주 자기장과 오로라 관측 임무를 수행한다. 관측에 최적화된 태양광 조건을 맞추기 위해

위성은 ‘승교점 지방시(LTAN)’가 낮 12시 40분인 태양동기궤도(SSO)에 진입해야 한다. 이 궤도 진입을 위한 골든 타임이 바로 오전 0시 54분에서 1시 14분 사이다. 날씨 외에도 국제우주정거장(ISS)과의 충돌 회피를 위해 27일 오전 1시 10~12분 구간은 피해야 한다.

한편 이번 발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종합기업으로서 제작 총괄을 맡은 첫 번째 사례다. 누리호가 성공하면 이륙 13분 27초 후 주 위성을 분리하고, 이후 20초 간격으로 큐브위성을 사출하며 비행을 마무리하게 된다.

/김서현 기자 seoh@